# 세월호 10년, '그날의 진실' 떠오를 줄 모르고…

성과없이 끝난 진상 규명…관련자 다수 무죄·사면 추모 체험공간 '국민해양안전관' 방문객 죄책감만

#### 팽목항 현장 르포

2014년 온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0주기를 맞았다.

진도 팽목항은 세월호의 비극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우리 지역에 더 큰 아픔으로 자리잡았다.

10년 동안 진도는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희생자 304명 중 5명은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진실규명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침몰 원인과 책임자 등 '그날의 진실'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못했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2015년부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까지 3개의 조사위원회가 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 이 없는 한계를 안고 출범한  $4\cdot16$ 세월호참사특별 조사위원회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년여 만에 종료됐다.

족했지만 진상규명은 미완으로 남았다.

세월호 인양이 추진되고 2017년 3월 '세월호 선 제조사위원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2018년 3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선체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인설'과 외부 충격에 의 한 '외력설' 모두 가능성이 있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놓은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관련자 다수가 무죄 또는 사면을 받으면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았다.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 없이 혼자 빠져나간 이준 석 선장은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살인혐의로 무 기징역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항해사와 승무원 14명도 유기치사 등 혐의로 실형 이 확정됐고, 현장 구조책임자였던 김경일 전 목포 해경 123정 정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처벌은 민간과 현장 책임자에 그쳤다. 김 석균 전 해경청장 등 기소된 해경 지휘부 10여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

령 비서실장도 무죄를 확정받았고, 세월호 유가족 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이 선고됐던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들은 올 설 연휴 특별 사면을 받았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2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진도는 변했지만, 아픔은 여전= 세월호는 진도 지역민들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다.

참사당시와 그 이후 전 국민적인 슬픔이 진도에 응결됐기 때문이다. 진도 지역민들은 "진도군을 '위험한 곳', '가지 말아야 할 섬'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지 않고서는 참사 발생 전 '청정 진도', '보배섬 진도'의 명성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기름유출로 조업이 중단되고 농수산물 판매가 어려움을 겪으며 9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어민들은 소송전까지 감수했었다.

10년 세월 이후 당시를 회상하는 진도경제는 다 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그날의 아 픔을 간직하고 있다.

30년간 진도에서 수산물을 팔았다는 이선암(여·63)씨는 "세월호 사태가 막 터졌을 때 예민한 사람들은 찝찝해서 못 먹겠다며 진도 수산물을 피하기도 했다. 택배 받아놓고 진도산이라며 반품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그때 너무 힘들고 억울한 마음도들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진도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강순신(여·65)씨 또한 "사람들이 다 우울하고 힘든데 식당에 와서 밥 먹을 정신이 있겠나. 그 때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 어져 많이 힘들었지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생각 하면 힘들단 소리조차 못하겠더라"고 말했다.

진도 지역민인 조영일(54)씨는 "세월호 이후 희생자 가족들도, 진도와 목포 사람들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잊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떠오르면 다들 눈물이 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들이 세월호를 계속 상기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겠나"고 전했다.

/진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둔 14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희생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 팽목항 '희생자 추모' 발길 잇따라

세월호 참사 후 희생자들이 수습된 팽목항은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 고 있었다.

지난해 8월 진도에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터미 널이 팽목항 옆에 새롭게 조성됐다. 광주일보 취 재진이 팽목항을 찾은 지난 12일 주말을 앞두고 제주로 떠나는 여행객들은 노란색 리본이 그려 진 빨간 등대를 보고 그날의 아픔을 떠올렸다.

제주도로 가는 길에 일부러 진도를 찾았다는 양정숙(여·43)씨는 "여전히 아이들의 죽음에 죄 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액심과 색임심을 드신다 더 문서물을 밝혔다. 양씨에게 세월호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의 조카는 당시 세월호에 승선할 예정이었다.

그는 "배가 바뀌어 조카가 세월호에 타지 않았다는 소식에 '다행이다' 고기뻐했지만 나중에 생

각해보니 희생 당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한참 울었다"며 "그날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양씨는 또 "이제 10년인데 팽목항에 아무것도 없다. 벌써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 며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벤치 앞에 노란 꽃다 발을 놓았다.

방파제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는 가족들이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길 기다리며 머물렀던 임 시 컨테이너 숙소가 '팽목기억관' 이라는 이름으 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팽목기억관 내부에는 희생자들의 영정사진과 '너희가 못 피운 꽃을 잊지 않겠다'는 문구가 남 아있었다.

8살 아이와 함께 이곳을 찾은 정모(여·46)씨는 "덤덤해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어린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 다시 눈물이 난다"며 "그 사이 나도 엄마가 돼 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0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국민해양안전관(안전 관)이 지난해 12월 완공돼 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팽목항에서 500여m 떨어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에 지어진 안전관(지하 1층~지상 2층규모)에는 정식 개장을 한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2430여명이 찾았다.

안전관 밖에는 수학여행을 나섰다가 희생당 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6살 딸 리우양을 데리고 이곳을 찾은 김승일 (39)·김윤지(여·38) 부부는 "아직도 세월호를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 딸이 생기고 나니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절절히 느껴진다"며 울음을 참지 못했다. /진도=장혜원 기자 hey1@

###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 집회 허용

#### 대법, 최종 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가능 여부를 두고 2년간의 법정다툼이 끝났다.

대법원 2부(대법관 신숙희)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이 서울용산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통고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촛불행동은 지난 2022년 5월 28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 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했다.

촛불행동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 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 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 "전보 명령 부당" 광주시립1요양정신병원 노동자들 구제 신청

광주시립1요양정신병원 노동자 4명이 "전보명 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광주시와 빛고을의료재단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문직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4명이 유사 업무가 아닌 정신병원 보호사와 조리원으로 전보 된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보임에도 신의칙상 요 구되는 노조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에 해당해 부당전보라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노조는 "이들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동조합 전 간부거나 현 간부"라면서 "지난 3월초 적자 등을 이유로 재활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을 폐 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지 만 이들이 협의를 거부하자 부당전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측은 "지난해 장기간 파업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구조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수차례 권고사직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아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은 '어용노조' 설립 의혹이 제기돼 노동 당국이 병원 운영진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1号研五音号71些